

안전충남 2050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



I
안전비전 수립 개요

II
충남 안전 환경 진단

III
2050년 안전한 충남을 위한 비전 제언

IV
향후 계획



Table of Contents

I. 안전비전 수립 개요 ————— 04

1. 비전 수립의 이유
2. 비전 수립의 과정과 방법

II. 충남 안전 환경 진단 ————— 08

1. 환경 분석
2. 재난안전관리 여건
3. 관련계획 검토
4. 도민 의견 조사
5. 충남의 재난안전관리 종합진단

III. 2050년 안전한 충남을 위한 비전 ————— 38

1. 기본이념
2. 안전비전과 목표
3. 목표별 전략 및 추진과제

IV. 향후 계획 ————— 78

1. 실행계획 수립
2. 행·재정적 지원
3. 평가체계 개발



I. 안전비전 수립 개요

1. 비전 수립의 이유

1)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미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청남도를 위한 제안

- 기계문명과 과학기술의 진화가 가속화 될 미래사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 미래사회 안전에 대비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세우고, 소통 · 창의성 · 분석력 · 협업의 방법을 통해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비전수립으로 밝히고자 함

2) 기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반성

■ 안전 환경변화와 전통적 관리체계의 한계

- 대규모 자연재난과 각종 인적 · 사회적 재난의 발생, 경제수준 및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됨
- 안전관리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전망 제공,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 시민 네트워크형성 등 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됨
- 재난 발생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발전 역량에 대한 침해가능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도록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난 발생에 총체적 ·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수요자로서 국민의 요구변화

- 재난에 대한 숙명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이 생활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을 요구받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민 생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 간의 정책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공통의 가치 지향성 설정이 시급함

3) 새로운 가치 설정 필요성

■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재난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임
- 현대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안전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의 제공이 가장 근본적인 복지라 할 수 있음
- 안전문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동의하고 협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어야 하며, 오랜 시간을 요하므로 미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 과학적 예측을 통한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 미국연방위기관리청(FEMA)의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 예측 · 저감 기술개발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재해복구비용을 7달러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화 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구축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함
-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시 생존을 돕고, 지역과 개인 스스로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방향과 기법이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인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민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고, 단편적 · 단편적 사업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 빈발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기인하여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이자 최종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단체가 안정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행정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일관된 지향성이 필요함

2. 비전 수립 과정과 방법

1) 비전 수립의 기본원칙

■ 대화와 소통을 통한 참여형 안전정책 수립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 계획이 아닌 도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작성
 - 비전 수립과정에서 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 민감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 수립
 - 도민 안전을 위한 비전 수립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 도민의 합의 유도

■ 상생과 균형을 통한 밀착형 안전정책 구현

-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사람, 경제,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과 균형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안전 약자들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
 - 시설물 위주의 구조적 안전대책을 보완하여, 생활안전·산업체 안전·도민참여·안전 문화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보강함으로써 구조적 측면과 비구조적 측면의 균형 도모

2) 비전수립 추진 체계

■ 도민 의견 반영

- 다양한 계층의 주민 대상 조사
 - 15개 시·군별 총28회 면담인터뷰 실시(재난 유형별, 계층별)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 요구 파악 및 사업 발굴
- 타운홀미팅(2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 조사
- 시군 재난 및 안전 관리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안과제 파악

■ 도민과 전문가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확산

- 워크숍 개최(5회)를 통하여 공무원·전문가·도민이 합동으로 비전 수립에 대한 목표와 핵심가치 설정 및 공유
- 국내외 위기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심포지움을 통한 비전 수립의 이론적 토대 강화
- 타운홀 미팅(2회, 권역별)을 통한 비전의 핵심 가치 및 목표와 전략 주요 내용에 대해 도민과 내용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전문가 중심의 비전위원회 구성

- 비전위원회
 -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도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 구성
 - 충남 안전비전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안전충남비전(안)에 관한 의견 검토 (4회 운영)
- 전문가와 공무원, 연구자 등 8인으로 구성된 안전충남비전 실행위원회 운영 (07시 조찬회의 16회 운영) 및 워크숍 실시 (5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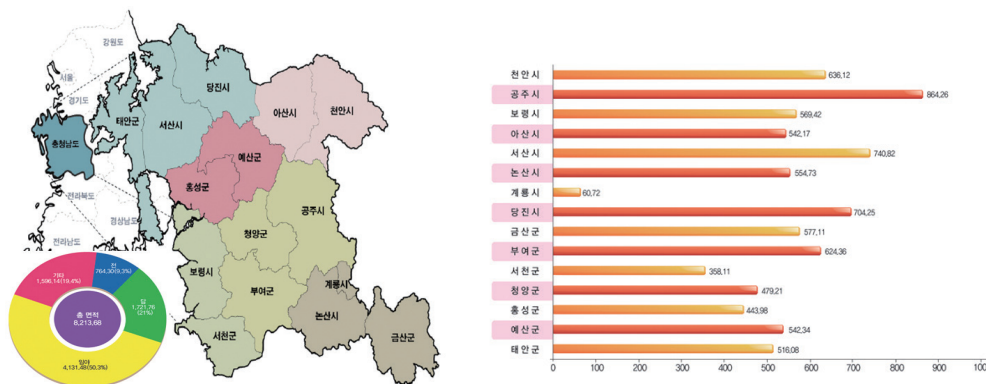
II. 충남 안전 환경 진단

1. 환경 분석

1) 기후변화 추이 및 전망

■ 지리적 입지

- 대중국 교역 및 환황해권 교류의 거점지역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남은 경부·호남·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부·호남 KTX 등 국가 중추기간망이 연결되어 있음
- 충남은 8개 시, 7개 군으로, 총 면적 8,204km²로 전국의 8.6%를 점유하고 있으며, 271개 도서를 포함하는 해안선 연장 1,062.2km의 연안지역이 있음



[그림 2-1] 충남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시군별 면적

■ 기후변화 추이

- 최근 70년간 뚜렷한 기온상승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폭염일수는 줄어든 반면, 여름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은 2012년 기온 최고극값이 36.0℃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연간 강수량이 2,141.8mm, 최대순간 풍속은 2012년 26.3%를 기록한 바 있음

■ 기후변화 전망

- 충청남도의 향후 30년간 기온 상승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강수량, 여름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표 2-1〉 미래 30년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전망

구분	2025년	2035년	2045년	경향성
평균기온(℃)	12.94	13.23	14.84	△0.95(℃/10년)
최고기온(℃)	16.15	16.52	17.15	△0.50(℃/10년)
최저기온(℃)	9.99	10.18	11.08	△0.55(℃/10년)
연강수량(mm)	1,083.98	1,019.35	1,210.00	△63.01(mm/10년)
여름일수	132.29	139.32	139.92	△3.82(일/10년)
폭염일수	11.69	12.02	23.81	△6.06(일/10년)
열대야일수	17.73	20.47	26.49	△4.38(일/10년)

※자료: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변화연구소, 2015,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과거70년, 앞으로 30년'」.

2) 인구 현황 및 전망

■ 인구현황

- 충남의 인구는 2014년 기준 총 2,116,830명으로 내국인 2,062,273명, 외국인 54,557명이며, 세대당 인구수는 2.43명으로 나타남
- 2014년 충남의 65세이상 고령자는 330,887명으로 충남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령화 지수는 110.2%임

〈표 2-2〉 2014년 충남 인구구조 특징

총인구	세대수	노령화지수	조출생률
2,1168,830	871,459호	110.2%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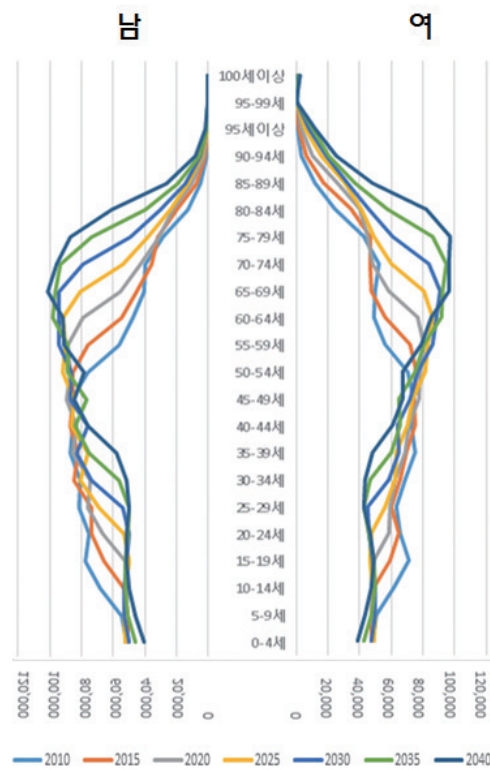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연보」.

-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14,880명으로 가장 많으며, 아산시 307,336명, 서산시 170,920명, 당진시 167,892명, 공주시 115,384명 순으로, 외국인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2030년 2,323,8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령별로는 유소년 인구(0-14세)의 경우 2010년 16.2%에서 2030년 13.1%로 낮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68.6%에서 60.4%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5.2%에서 35.2%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남녀별로는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여성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그림 2-2〉 충남의 남녀 인구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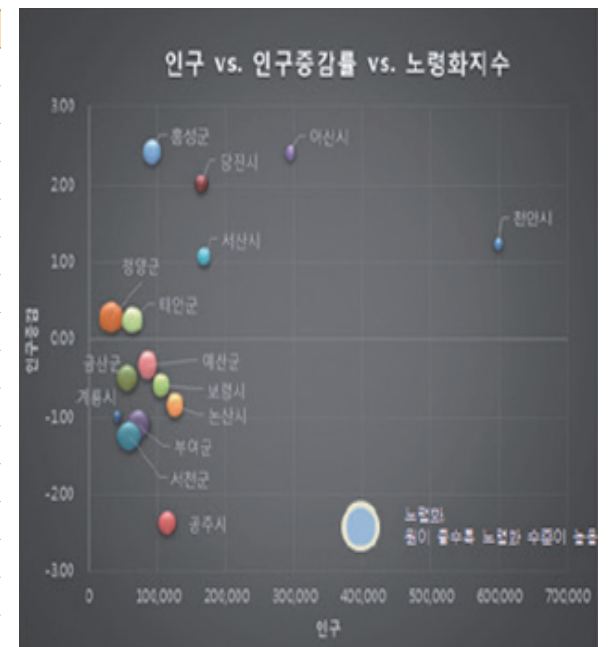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5세 미만 영유아 수는 98,147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

- 2014년 충남의 노령화지수는 2013년 대비 4.4% 증가한 110.2으로 전국 88.7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국 17시도 가운데 6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전망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수 대비 인구증감률과 노령화지수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주, 계룡, 부여, 서천의 경우 인구증감률은 낮은 반면, 노령화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난취약계층으로서 고령인구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임
-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으며(충청남도, 2013), 향후 고령화에 따른 위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3〉 2014년 충남 시·군별 노령화 지수

지역별	2012	2013	2014	증감율
총계	100.9	105.6	110.2	4.4%
천안시	46.1	47.8	50.9	6.5%
공주시	147.8	153.3	165.8	8.2%
보령시	146.7	153.0	164.4	7.5%
아산시	56.5	57.2	58.7	2.6%
서산시	87.8	90.2	95.3	5.7%
논산시	158.4	164.2	175.1	6.6%
계룡시	37.5	38.9	42.5	9.3%
당진시	97.7	98.3	99.2	0.9%
금산군	202.0	207.3	220.5	6.4%
부여군	246.1	253.7	276.2	8.9%
서천군	274.1	286.1	308.6	7.9%
청양군	301.5	308.6	327.8	6.2%
홍성군	161.6	162.4	168.6	3.8%
예산군	206.0	213.4	231.1	8.3%
태안군	209.2	220.0	237.2	7.8%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 사회지표 요약」.

3) 재난취약계층 현황 및 특징

■ 영유아 및 아동

- 충청남도의 아동인구는 2014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임

- 충남의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질병사고율 외에 사고부상률이 2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도 9.8%도 높은 수준임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 사회지표 요약」.

〈그림 2-3〉 충남 시군별 고령인구 구급사고의 종류별 비율(%)

■ 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지시설

- 충남의 장애인 인구수는 2015년 기준 124,801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5,661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 13,537명, 시각 12,097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구1만명당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8.6개소로 전국 평균 10.2개소보다 낮으며, 전남, 대구, 인천에 이어 4위로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총 13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은 총 59개소이며, 천안, 공주에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외국인 수는 56,583명으로 경기, 서울, 경남,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나타남

〈표 2-4〉 충남 외국인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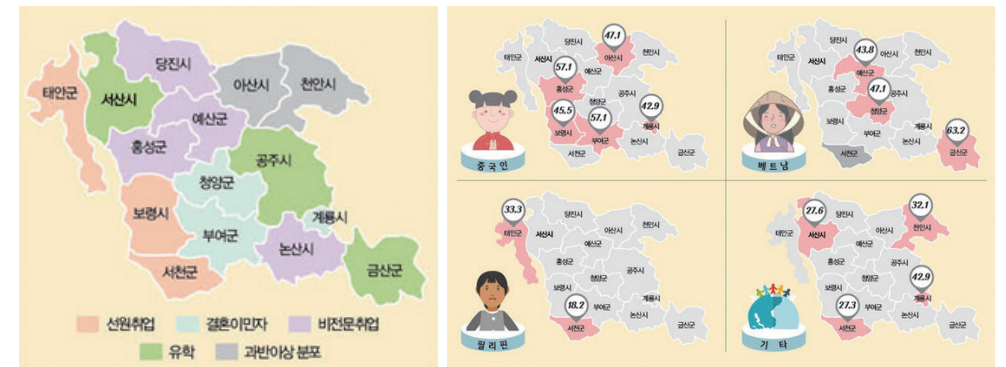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충남	42,753	48,091	46,141	49,924	54,557	56,58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 11. 25.).

- 이 가운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국제결혼, 인지, 및 귀화)은 전국 기준 305,446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한국계) 98,037명, 중국인 81,010명, 베트남인 58,761명, 필리핀인 17,353명, 일본인 13,239명으로 높으며, 여성의 비중이 높음
- 거주특성을 살펴보면, 천안, 아산에 전체 외국인의 과반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산, 공주, 금산

의 경우 유학생의 비중이 높음

- 국적별로는 아산·홍성·보령·부여·계룡의 경우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예산, 청양, 금산은 베트남인이, 태안, 서천군에는 필리핀인의 비율이 높음



※자료: 충청남도, 2014,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49; 50」.

〈그림 2-4〉 충남 시·군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현황

2. 재난안전관리 여건

1) 2015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및 주요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에 대한 충청남도의 여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 사용된 화재·교통안전·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분야를 설정함

■ 화재

- 충남의 화재분야 지역안전등급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시군별로는 도청이 소재한 홍성이 2등급으로 높은 편이나 천안·계룡·당진·태안이 3등급, 아산·서산·논산·금산·서천·청양·예산이 4등급, 공주·보령·부여가 5등급에 속해 대부분 지역의 화재 취약성이 높음
- 2014년 기준 충청남도의 소방대상시설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3,334개소 창고시설 8,235개소, 공장 7,683개소, 복합건축물 3,465개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 1,867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홍성군이 3,120개소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창고시설, 복합



건축물은 천안시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아산시는 공장과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음

- 화재피해의 경우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재산피해액이 많으며, 이 재민수 발생이 높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충남의 화재피해는 2012년 3,0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피해액은 2010년도에 27,140,238원으로 가장 많았음
 - 인명피해의 경우 2010년에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재민 수의 발생은 2011년이 2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표 2-5〉 최근 5년간 충청남도 화재피해 현황

년도	발생건수	피해액	피해경감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소계	사망	화상	
2010	2,994	27,140,238	—	135	26	92	208
2011	3,089	17,955,682	516,597,251	124	18	117	250
2012	3,098	21,739,562	458,641,995	95	17	107	207
2013	2,784	24,508,566	720,901,422	108	13	82	165
2014	2,838	20,475,505	483,674,055	86	26	70	210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 한편, 소방관서별로는 천안(동남, 서북)이 2014년도에 5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산이 350건으로 많이 발생함
- 피해액에서는 천안이 가장 많고, 당진, 아산의 순으로 나타남

■ 교통

- 충남의 교통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광역시도 중 대구·울산·전북과 같은 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하위 등급에 속해 있음
- 시군별로는 계룡·예산이 2등급이나, 천안·금산·부여·홍성이 3등급, 공주·보령·아산·서산·서천·태안이 4등급, 청양은 5등급에 속하는 등 교통안전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최근 5년간 충남의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충남의 교통안전 분야가 낮은 등급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경부-서해 고속도로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교통물류 중심으로서 교통량이 높은 데 따른 점을 짐작할 수 있음

〈표 2-6〉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11.22	10.64	10.47	9.72	11.11
서울특별시	12.04	11.63	11.62	11.14	13.54
부산광역시	10.79	10.67	11.29	9.43	10.45
대구광역시	13.44	12.99	12.43	11.29	13.54
인천광역시	9.82	9.13	8.31	7.00	7.09
광주광역시	15.19	13.94	13.94	12.76	13.90
대전광역시	9.51	9.69	8.82	8.45	9.50
울산광역시	9.86	9.13	9.02	8.77	10.27
세종특별자치시	—	—	6.51	6.74	7.09
경기도	9.62	9.31	9.28	8.70	10.25
강원도	13.67	13.47	12.84	11.89	12.90
충청북도	12.20	11.87	11.62	11.12	12.77
충청남도	9.75	8.91	8.50	7.80	9.04
전라북도	13.35	12.51	11.87	10.81	11.85
전라남도	13.27	11.61	11.55	10.80	12.00
경상북도	13.03	11.58	11.57	10.88	12.22
경상남도	9.26	8.52	8.59	8.11	8.88
제주특별자치도	12.83	11.78	11.43	11.12	11.6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6.11.25)

- 시군별로는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룡시와 아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부 지역의 교통사고발생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충남이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이 교통안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자연재해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기초한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등급을 살펴보면, 충남은 3등급으로 1등급의 세종·전북, 2등급의 서울·대구·경북·제주에 이어 중위 등급에 속하고 있음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는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가-마의 5개 등급(세부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최하위 15%그룹과 신청 자치단체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68.3%가 중간그룹인 다와 마 등급에 속하고 있음
- 위험환경 수준은 계룡이 0.392로 가장 안전한 환경인 반면, 부여의 경우 0.615로 가장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관리능력은 계룡시 0.894, 공주시 0.887, 아산시 0.876 등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서천의 경우 0.638로 다른 시군과 대비하여 매우 취약함
- 방재성능은 천안이 0.925로 가장 높은 반면, 예산은 0.240, 계룡은 0.280으로 매우 낮음

〈표 2-7〉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천안시	0.551	0.709	0.925	0.626	6
공주시	0.485	0.887	0.770	0.531	4
보령시	0.535	0.785	0.450	0.725	8
아산시	0.532	0.876	0.310	0.777	9
서산시	0.452	0.838	0.340	0.714	8
논산시	0.555	0.800	0.310	0.808	10
계룡시	0.392	0.894	0.280	0.705	8
당진시	0.485	0.815	0.536	0.638	6
금산군	0.567	0.743	0.864	0.632	6
부여군	0.615	0.704	0.382	0.843	10
서천군	0.552	0.638	0.623	0.726	8
청양군	0.550	0.835	0.400	0.748	8
홍성군	0.469	0.723	0.488	0.682	7
예산군	0.459	0.771	0.240	0.795	9
태안군	0.510	0.742	0.582	0.662	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6. 11. 25)

- 2012년 충남이 발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살펴보면, 해수면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충청남도, 2012), 향후 자연재해 분야의 위험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범죄

- 충남은 범죄안전등급은 대구·대전·경기·경남과 함께 3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서울·부산·강원·충북의 4등급, 광주·제주의 5등급보다는 양호한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계룡이 1등급으로 범죄안전등급이 가장 높으며, 공주·서산·논산·당진·서천·청양 2등급, 보령·아산·부여 3등급임, 천안·금산·홍성·예산·태안이 4등급에 속하고 있음
- 충남의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강력범·폭력범·기타 형사범·특별법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풍속범은 감소추세이나 강력범·폭력범 등 직접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민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죄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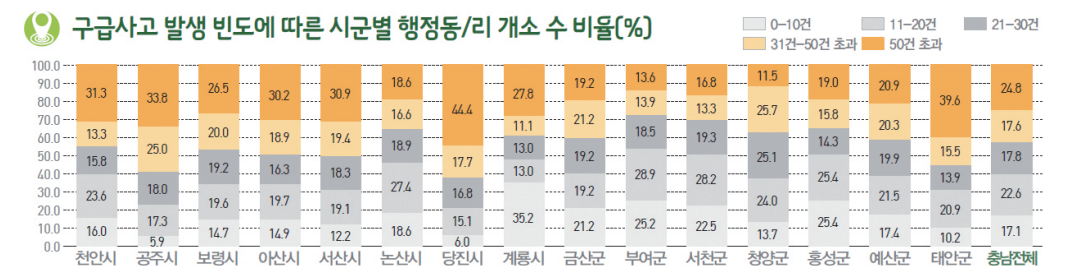
〈표 2-8〉 최근 5년간 충남의 범죄발생 현황

연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사범	특별법범
2010	70,989	924	12,545	7,381	9,773	566	2,020	37,780
2011	63,052	1,018	12,369	8,897	10,319	507	2,155	27,787
2012	67,551	1,043	14,035	9,480	11,282	462	2,544	28,705
2013	70,573	1,110	13,152	9,384	13,110	382	2,841	30,594
2014	71,135	1,131	11,976	9,726	12,243	420	3,189	32,45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6. 11. 25)

■ 안전사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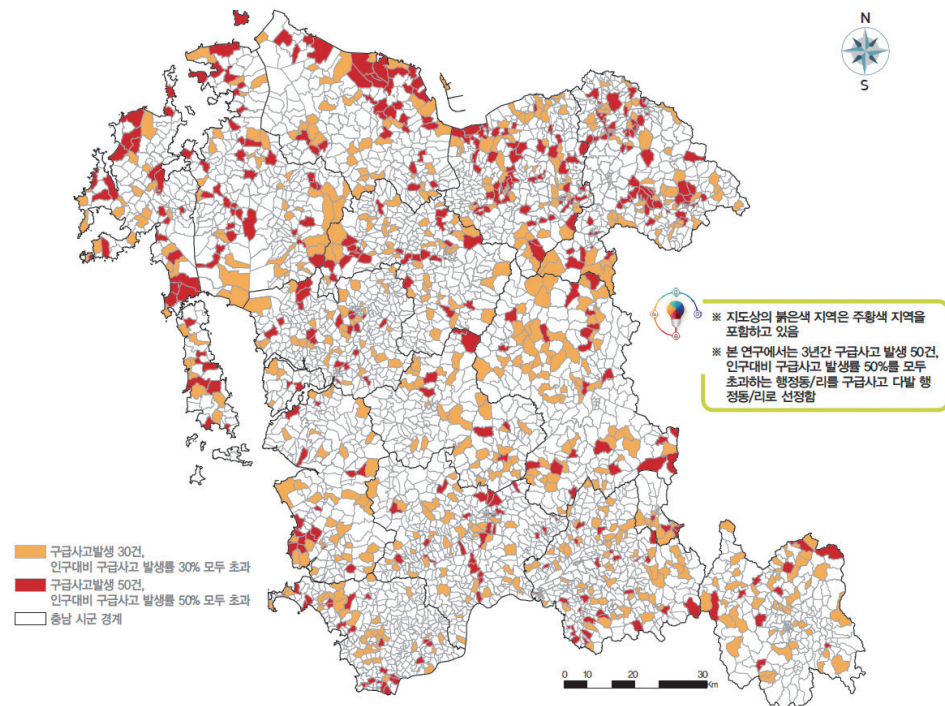
- 충남의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울산·제주의 5등급, 서울·광주·강원·전남보다는 상위 등급에 속하고 있으나 가까운 세종(1등급), 대전(2등급), 충북(2등급)에 대비하여 낮은 등급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홍성 1등급, 천안·아산·계룡·부여·예산 2등급, 서산·논산·당진·금산·서천·청양·태안 3등급, 보령 4등급, 공주 5등급임
- 충남의 최근 3년(2012~2014) 총 구급사고 중 정상 출동건은 279,409건으로 이 가운데 200,097건(71.6%)의 구급사고가 시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음
- 시군별로는 천안시(21.2%), 아산시(12.3%), 서산시(8.0%)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구급사고 발생은 농촌지역이 66.2%로 도시지역보다 많이 발생함



※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그림 2-5〉 최근 3년간 충남 시군별 구급사고 발생빈도 현황

- 시군별 행정동/리 별로는 인구대비 구급사고 발생률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이 전체 4,417개소 중 974개소(22.1%)이며, 인구대비 50%이상 발생률 지역도 387개소(8.8%)에 이르고 있음
- 시군별로는 태안(16.0%), 당진(14.2%), 아산시(12.7%) 소재 순으로 나타남



※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그림 2-6] 최근 3년간 충남 시군별 구급사고 다발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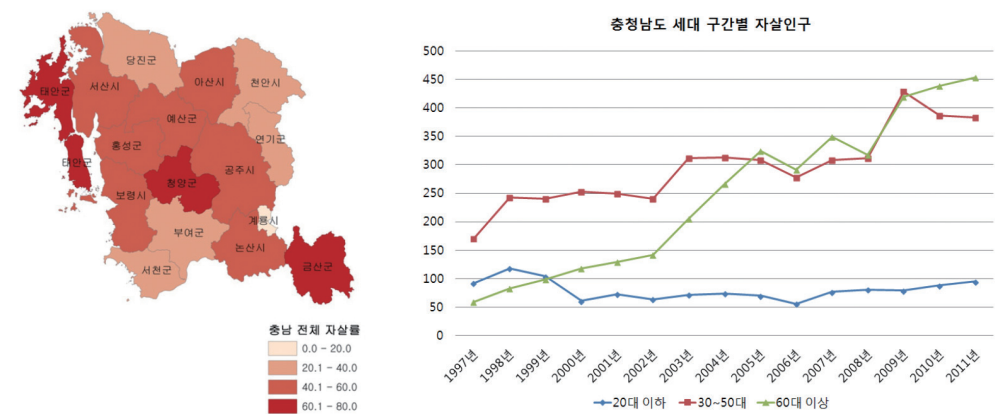
- 구급사고의 종류별 발생 중 사고부상은 청양(25.7%)이 가장 많으며, 질병사고는 청양(44.1%), 교통 사고는 당진(17.2%)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청양군의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또한 충남의 경우, 2015년 기준 산발발생건수는 23건으로 최근 10년 평균(05-14) 16.5건의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발관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요구됨

■ 자살 분야

- 충남은 강원, 부산의 5등급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대전·대구·전남과 함께 자살 안전등급이 4등급의 위험지역으로 발표됨
- 시군별로는 계룡이 1등급이나, 천안·아산·서산·부여·홍성 3등급, 논산·당진·금산·예산·

태안 4등급, 서천·청양 5등급 등 전반적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음

- 충남의 2011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태안·청양·금산의 자살률이 타 시군에 대비하여 높은 가운데, 세대별로는 60세이상 고령인구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50대 자살인구는 2008년을 분기점으로 2009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속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자살에 대한 방안 대책 마련에 관심이 요구됨



※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 제113호」.

[그림 2-7] 충남의 지역별, 세대별 자살인구 현황(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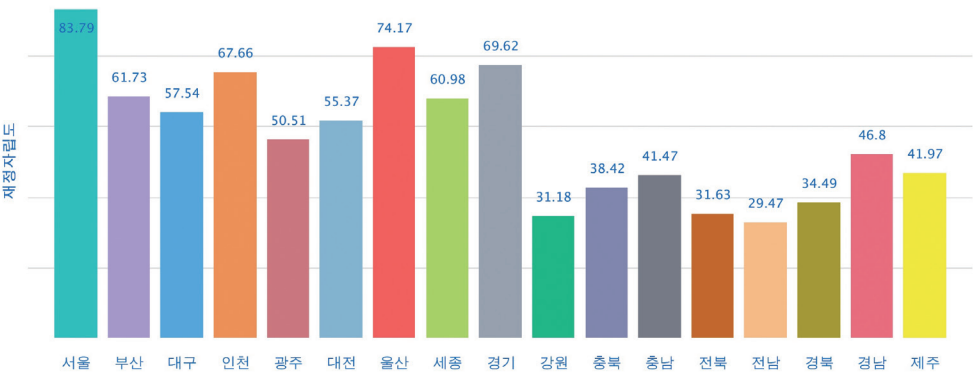
■ 감염병 분야

- 충남의 감염병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세종·전남의 5등급, 경북·대구·부산의 4등급 이외의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계룡이 1등급, 천안·청양·홍성 2등급이나, 아산·서산·당진·금산·부여·예산·태안이 3등급, 공주·보령·서천이 4등급에 속하고 있어 농어촌을 중심으로 낮은 등급의 지역이 다수 분포하며, 지역간 편차가 큼
- 2000년 이후 전국 법정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해당 기간 시군별로 누적 발생건수는 태안·보령·예산·아산의 순으로 높으며, 천안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2) 재난안전관리 여건 현황

■ 재정자립도



구분(백만원, %)	자체수입(A)	자치단체예산규모(B)	재정자립도 (A/Bx100)
본청	1,464,040	4,765,425	30.72
천안시	529,110	1,179,945	44.84
공주시	114,638	548,000	20.92
보령시	127,074	528,509	24.04
아산시	378,089	849,900	44.49
서산시	196,232	635,056	30.90
논산시	98,549	529,382	18.62
계룡시	40,760	144,136	28.28
당진시	217,799	646,482	33.69
금산군	71,232	320,969	22.19
부여군	89,308	494,300	18.07
서천군	65,676	390,646	16.81
청양군	59,113	303,804	19.46
홍성군	107,757	464,615	23.19
예산군	83,409	469,646	17.76
태안군	101,596	387,679	26.21

※ 자료: 지방재정365 홈페이지(2016.11.25.)

〈그림 2-8〉 2015년 충남의 재정자립도 현황

-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41.47%로 전남·강원·전북·경북·충북에 이어 광역 시도 가운데 하위 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별로는 계룡시가 자체수입 대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 재정자립도는 천안·아산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반면, 서천·예산·부여·논산·청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재정투자계획

- 2016년 총 소요예산 596,549백만원

〈표 2-9〉 재난관리 사업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보조사업			자체사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전년대비 증감	15년 실적	16년 계획	전년대비 증감
계	622,931	543,860	▽79,071	52,366	52,689	323
자연재난	291,465	310,666	19,201	6,973	5,743	▽1,230
사회재난	103,703	91,044	▽12,659	16,897	17,876	979
안전관리	227,763	142,150	▽85,613	28,496	29,070	574

■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 활동에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률은 전국 수준을 고려할 때, 충남의 경우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시군별로는 2014년 기준 천안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보임

〈표 2-10〉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억원, %)

지방자치단체		적립 기준액 (누계)	적립액 (누계)	적립률				사용액				기금잔액
				12년	13년	14년	누계	12년	13년	14년	누계	
충남	소계	1,652	1,608	105	101	96	97	99	101	84	1,047	790
	본청	747	747	100	100	100	100	27	31	38	457	412
	천안시	260	195	41	86	68	75	9	4	3	116	108
	공주시	46	52	100	154	111	113	7	6	4	44	12
	보령시	44	44	100	100	95	101	4	2	1	30	18
	아산시	155	157	228	100	100	101	20	14	12	92	81
	서산시	84	84	100	100	100	100	3	5	1	35	63
	논산시	46	46	100	100	100	100	1	6	2	33	19
	당진시	78	80	106	100	100	102	10	10	10	73	15
	계룡시	9	9	100	100	100	100	—	1	—	6	3
	금산군	24	28	100	209	155	118	4	3	1	19	12
	부여군	29	30	100	100	100	104	2	4	2	26	6
	서천군	24	24	100	100	100	100	2	3	2	22	5
	청양군	12	12	100	100	100	100	—	4	2	8	7
	홍성군	33	37	100	100	100	112	2	2	2	31	9
예산군	33	35	100	100	100	107	3	3	4	29	13	
태안군	28	28	100	100	100	100	5	3	—	26	7	

※ 자료: 감사원, 2014, 「2014 재난관리기금 처분결과」.

■ 소방인력 현황

- 충남의 소방인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2,090명이며, 현장 대응을 고



려할 최하위 소방사 인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본청 및 기관 소속을 제외한 소방관서별로는 당진 소방서의 인력이 가장 많은 반면, 예산 소방서의 인력이 가장 적은 실정임
- 또한 2010년 이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를 고려하더라도 충남의 소방인력은 전국 수준보다 높은 상태임

〈표 2-11〉 재난관리 사업별 예산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1,431.57	1,421.81	1,387.48	1,341.03	1,285.67
충남	1,019.91	1,073.18	1,077.99	1,040.46	963.6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6. 11. 25)

- 119안전센터의 경우도 1개소당 담당주민수는 31,246.56명으로 강원, 제주, 경북, 세종에 이어 상위 4위 수준으로 높은 편임

〈표 2-12〉 최근 5년간 충남의 119안전센터 1개소당 주민수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54,085.30	54,552.99	54,258.01	54,814.00	53,134.49
서울특별시	90,460.92	89,909.46	88,654.94	88,205.61	87,854.20
부산광역시	67,319.06	66,999.30	66,763.85	65,326.57	65,174.09
대구광역시	55,815.02	55,717.13	55,680.98	54,382.35	54,201.39
인천광역시	58,687.15	60,897.26	61,825.67	62,603.96	63,100.17
광주광역시	66,119.82	66,521.09	66,782.55	64,039.57	64,168.87
대전광역시	60,146.56	60,624.12	60,983.32	58,954.27	58,915.73
울산광역시	56,314.90	51,613.36	57,362.80	55,070.48	55,541.76
세종특별자치시	-	-	28,279.25	24,430.60	31,225.00
경기도	68,526.87	74,145.43	75,113.66	75,522.41	75,814.91
강원도	25,929.12	24,781.42	24,816.61	23,727.12	23,400.64
충청북도	43,042.44	43,413.97	41,200.74	41,387.68	40,485.46
충청남도	32,429.91	33,891.68	32,722.21	31,994.23	31,246.56
전라북도	38,936.73	38,245.53	38,231.45	38,223.78	38,195.10
전라남도	39,152.76	36,119.60	36,030.53	35,984.38	34,650.55
경상북도	34,049.62	34,167.03	34,156.37	32,136.19	31,404.58
경상남도	41,131.70	41,359.56	39,515.64	54,652.79	39,884.01
제주특별자치도	27,202.62	27,436.00	27,795.86	28,276.48	27,60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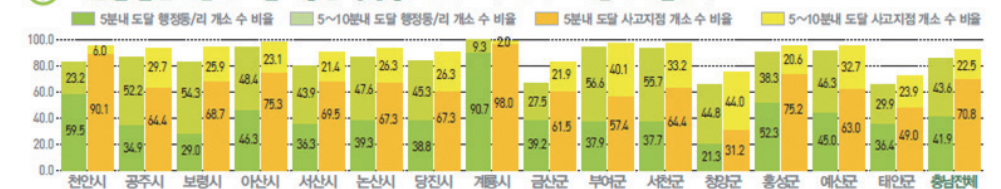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6. 11. 25)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주민수도 2014년 급증하여, 전국 상위에 위치하는 등 화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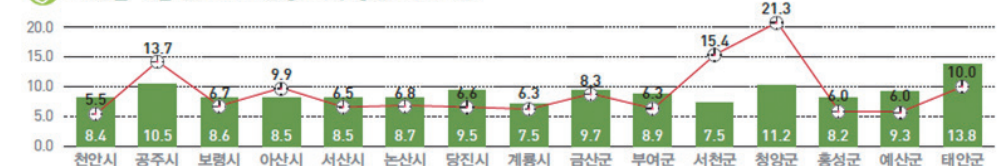
■ 구조구급 여건

- 충남의 구조구급 환경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강원,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경남에 이어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한편, 충남의 104개소 구급센터로부터 도출한 충남연구원의 골든타임 분석결과를 보면, 충남의 전체 행정동/리 기준으로 전체 4,417개 지역에 대해 3,777개 지역(85.5%)가 도착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인구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구급센터에서 10분 이내 도착거리에 위치하는 행정동/리 3,777개 지역 내에 전체 인구의 96.6%가 거주하고 있음
- 특히 시군별로는 계룡, 아산, 부여군 지역의 119안전센터가 골든타임 내 사고현장 도착가능성이 높게 배치되어 있음

시군별 골든타임내 도달가능한 행정동/리 개소 수와 사고지점의 비율(%)



시군별 구급센터에서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 정책지도 2016-3호(통권 5호)」.

〈그림 2-9〉 충남의 시군별 골든타임 내 행정구역 및 현장 도착 평균시간



■ 각종 위원회·협의회, 기관·단체 현황

〈표 2-13〉 안전관련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위원회 명	구성현황 (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안전관리위원회	도지사/32인(법령)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 충청남도협의회	도지사·민간대표/65인(법령)	안전문화운동 확산
통합방위협의회	도지사/31인(법령)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행정부지사/25인(조례)	재난대비 안전활동, 현장대응, 정책협의 등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재난안전실장/21인(법령)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지정 심의,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안전실장/36인(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실장/11인(조례)	저수지 실시설계 검토, 사업계획 승인 등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난안전실장/34인(조례)	시·군 시행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재해복고 공사 사전심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재난안전실장/15인(훈령)	사업지 선정, 정비계획 승인 등 심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9인(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심의
안전모니터봉사단	대표: 김윤호/ 5,889명	안전 위해요소 제보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
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15인	시군 자율방재단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현안업무 처리

■ 경찰인력 현황

- 충남의 경찰인력 중 경찰청 소속 경찰인력의 경우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해양경찰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경찰청 소속의 경우 계룡은 논산에서, 태안은 서산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해양경찰의 경우 보령과 태안에 거점을 두고 있음

■ 의료기관 현황

- 충남은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병원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환자 입원 등에 관련된 병상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병원의 병상수 증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종합병원 병상수 부족은 지역의 의료환경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시군별로는 천안시, 아산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청양, 태안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2014년 기준 충남의 전체 의료인력은 20,072명으로 의사는 2,53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는 천안, 아산, 논산, 공주의 순으로 의료인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양, 계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3. 관련계획 검토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기본방향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세움
- 비전과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5개 전략을 설정함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추진내용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 제시한 17개 중점 추진과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안전정책 총괄관리·개선 체계 구축,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 및 책임성 강화, 구조구급 현장대응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 확산,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안전복지 정책 강화, 예방을 통한 기능·업무 연속성 확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효적 재난예방 실현, 14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과제별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을 포함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는 12개 유형의 자연재난 관리대책, 10개 유형의 사회재난 관리대책, 7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이 제시됨



(2) 충청남도 종합계획

■ 개요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은 충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시행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임
-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 환경 관리의 주요과제인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을 포함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대단위 개발 사업과 도시화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기능의 향상과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선제적 방재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도민 친화적 안전안심 생활환경 조성

■ 방재분야 세부 추진시책과 주요 사업

-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방재부문 계획은 4가지 세부 추진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위험지구 정비 및 사전예방 강화는 구조적 재해대책과 비구조적 재해대책으로 구분하였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생태하천정비사업 등은 구조적인 대책, 방재도시계획체계 확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도시형 재난 대응종합계획, 풍수해보험 제도 확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등은 비구조적인 대책
 - 안전안심 생활환경 조성에서는 충남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재관련 시설물 확충,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안심 도시(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안전안심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을 계획함

■ 충청남도 종합계획 종합 분석

-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충남만의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과 유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교통과 주거 환경, 복지 분야 등에서 도시 안전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도시성장이나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시설과 기능 측면에만 집중하

여 안전 측면은 개발 논리에 가려져 소홀히 다루어져 있음

- 근본적으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개발은 그로 인한 피해 반복과 방재시설 재투자자의 악순환 고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높음
- 종합계획의 경우 재난을 계획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공간계획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점이며, 장기적인 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입장에서는 상위계획으로부터 수용해야 할 방재 관련 지침을 찾기 어려워 안전충남 만들기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됨

(3)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

■ 기본개요

- 충청남도의 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충남,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안전문화운동의 전개와 맞춤형 교육·홍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현장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관리의 역량 강화를 제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예·경보 및 종합관제 시스템 강화를 통한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시설물 사전예방 점검 및 안전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제시

■ 안전관리계획 종합 분석

- 과거 획일화된 재난관리 접근법에서 점차 다양하고 확대된 범위와 구체적인 맞춤형 재난 유형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시설 중심의 구조적 예방대책이나 비구조적 대응 대책에서 최근에는 생활안전 영역을 강조하여 안전에 대한 관점이 보다 유연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면이 강하여 비구조적 대책이 보강될 필요성이 있음
- 범죄와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



할이 필요함. 최근 안전영역에서 도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 주도의 참여유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참여유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성 인식이 쉽게 약화되어 안전불감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함

4. 도민 의견 조사 결과

1) 그룹별 심층 인터뷰 조사

■ 조사 목적

- 현재 충남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요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안전비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조사 설계

- 인구 계층별 / 재난 유형별로 구분하고, 시·군 분포를 고려하여 2016년 6월 29일 부터 8월 18일 까지 도민 9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 인구 계층별로는 노인 / 장애인 / 학부모 / 농어촌 / 시민단체 / 외국인 노동자 6개 그룹으로 구분
 - 재난 유형별로는 충남지역에 빈발하는 재난 및 위험 유형별로 문화재 화재 / 가족 전염병 / 해양오염 / 스쿨존 / 물놀이 사고 / 산사태 / 풍수해 / 청소년 수련시설 / 건설현장 / 어업 작업장 사고 / 해루질 / 세월교 / 다중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여 현장 방문 및 관련자 인터뷰 실시

〈표 2-14〉 현장조사 결과 주요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1	지역사회	6	교육	11	모름	16	어렵다	21	안전관리
2	못함	7	병	12	문제	17	주민참여	22	위험
3	없음	8	죽음	13	화재	18	자체적으로	23	주변
4	사람	9	연락	14	발전소	19	겨울	24	야간
5	생각	10	사고	15	감독	20	실질적	25	어르신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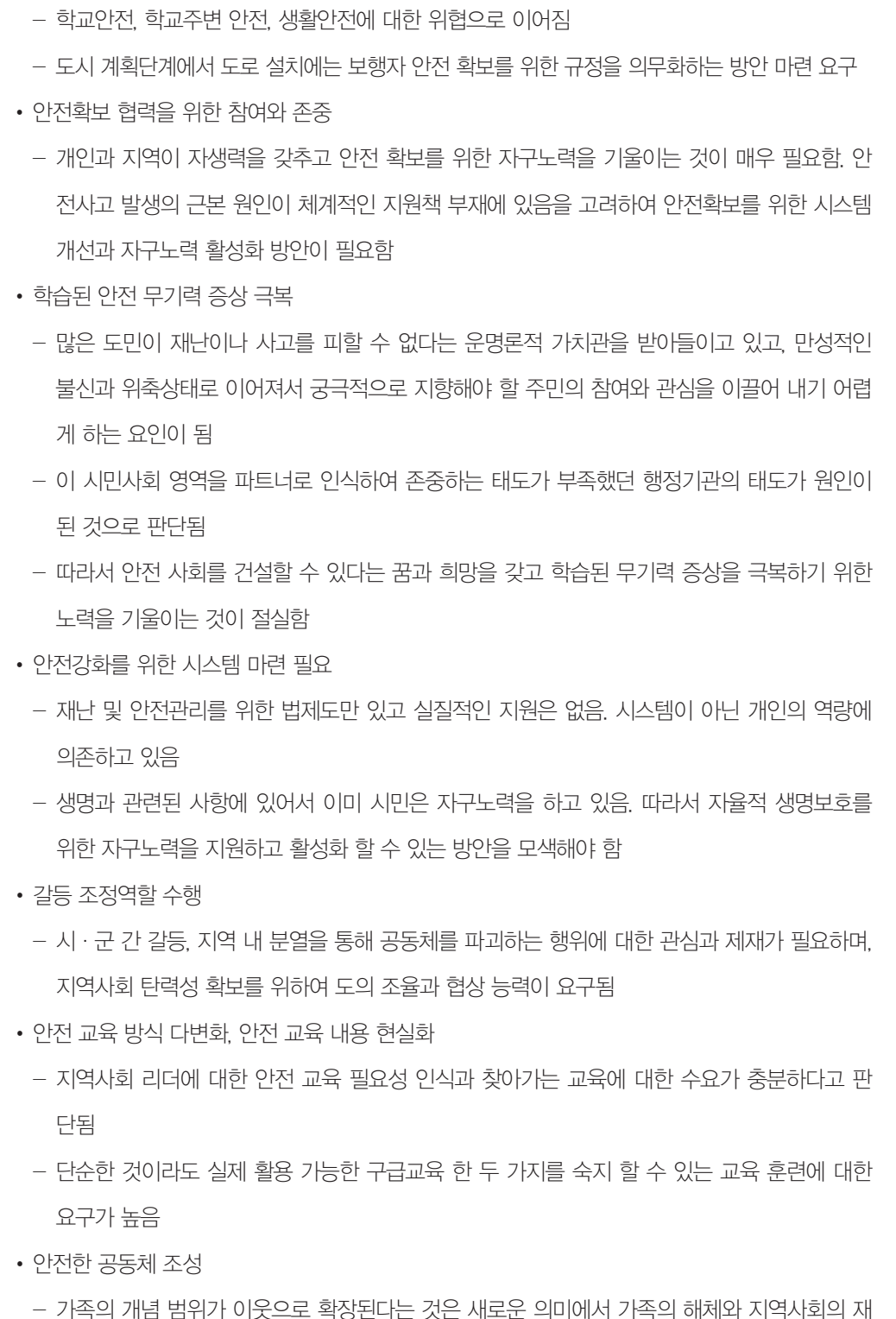
- 이에 따른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주민들의 주변인식은 사고, 병, 화재, 문제, 모름, 사람, 생각, 교육으로 집중되며, 사고와 병을 중심으로 인식의 관계가 나타남
- 즉 사고에 대한 정의는 ‘병’과 결부하여 ‘안전관리’와 ‘자체적으로’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사고’, ‘교육’, ‘병’은 ‘사람’의 문제와 결부하여 ‘생각’, ‘모름’ 등의 용어 사용과 결부되어 ‘교육’의 문제로 귀결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사고와 병의 관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 및 감독 등에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나, 위험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지의 문제, 주민참여 등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주요한 대상으로는 지역사회와 노인, 시간적으로는 야간 교육 등이 고려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모름’의 핵심키워드 과정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위험 문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MEASURES MEASURES	VALUE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STD.DEV.	0.09	0.09
MIN.	0	0
MAX.	0.25	0.333

〈표 2-10〉 현장조사 결과 주요 핵심키워드

- 계획에서 시설물 평가까지 안전 의무화
 - 모든 사업의 계획단계에 주민 안전관련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짐
 - 교량이나 도로 등을 건설한 이후에는 지역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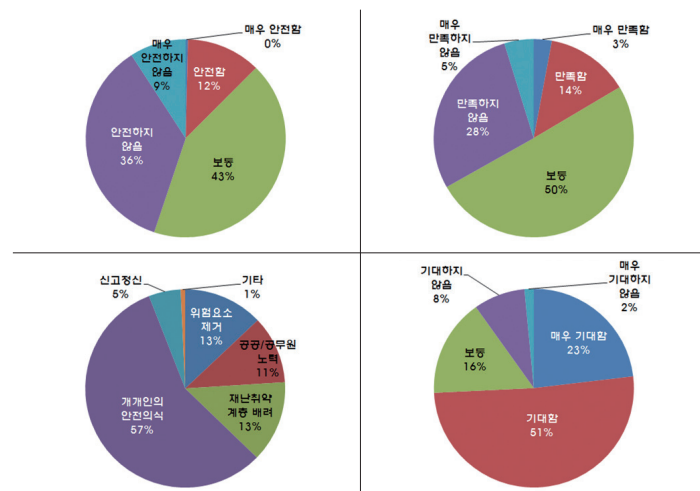




- 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에 의한 지역단위 안전한 공동체 조성 과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안전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형평성 확보
 - 노인, 외국인 인구 비율의 증가가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을 요구하는 만큼 지역의 특성과 안전 약자로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형평성 고려 필요
-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
 - 농민으로부터 학부모와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오염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불안 수위가 더 높게 나타남
- 지방정부의 안전정책 진화
 -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새로운 재난 유형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재난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난 상황 시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2) 타운홀 미팅 결과

- 2016년 9월 23일 / 27일 2회에 걸쳐 15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 참석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인터뷰와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10〉 충남 도민참여 타운홀 미팅 주요 결과

- 첫째, 충남도민의 경우 생활주변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주민 스스로의 재난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위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위험요인에 대해 추상적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위험요인별 대처방안과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공무원 · 전문가 워크숍 결과

■ 개요

- 실효성 있는 안전충남비전 수립을 위하여 실행위원회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방안 모색
- 참석대상 : 실행위원회 위원, 도 및 시·군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등 55명
- 일시 : 2016. 6. 10 ~ 6. 11

■ 시·군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워크숍 결과

- 시·군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필요사항, 선결과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된 의견을 취합
- 그 결과, 지원, 교육, 매뉴얼, 예방, 심리안전, 안전의식, 협력, 자원봉사, 일상복귀 등의 순으로 핵심어가 도출

표 2-22 시·군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워크숍 결과 도출된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1	지원	6	확보	11	주민
2	교육	7	심리안정	12	구축
3	매뉴얼	8	안전의식	13	자원봉사
4	복구	9	협력	14	일상복귀
5	예방	10	의식주	15	위로

- 제시된 의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안전, 교육, 심리안정, 신속, 예방, 복구, 자원봉사, 소통 등으로 나타남
- 재난발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생명과 신체의 손상과 같은 직접적 피해 못지 않게 가족, 행복, 일상의 파괴와 같은 정서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함
- 재난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체계의 마련도 필요
-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특권이 아닌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식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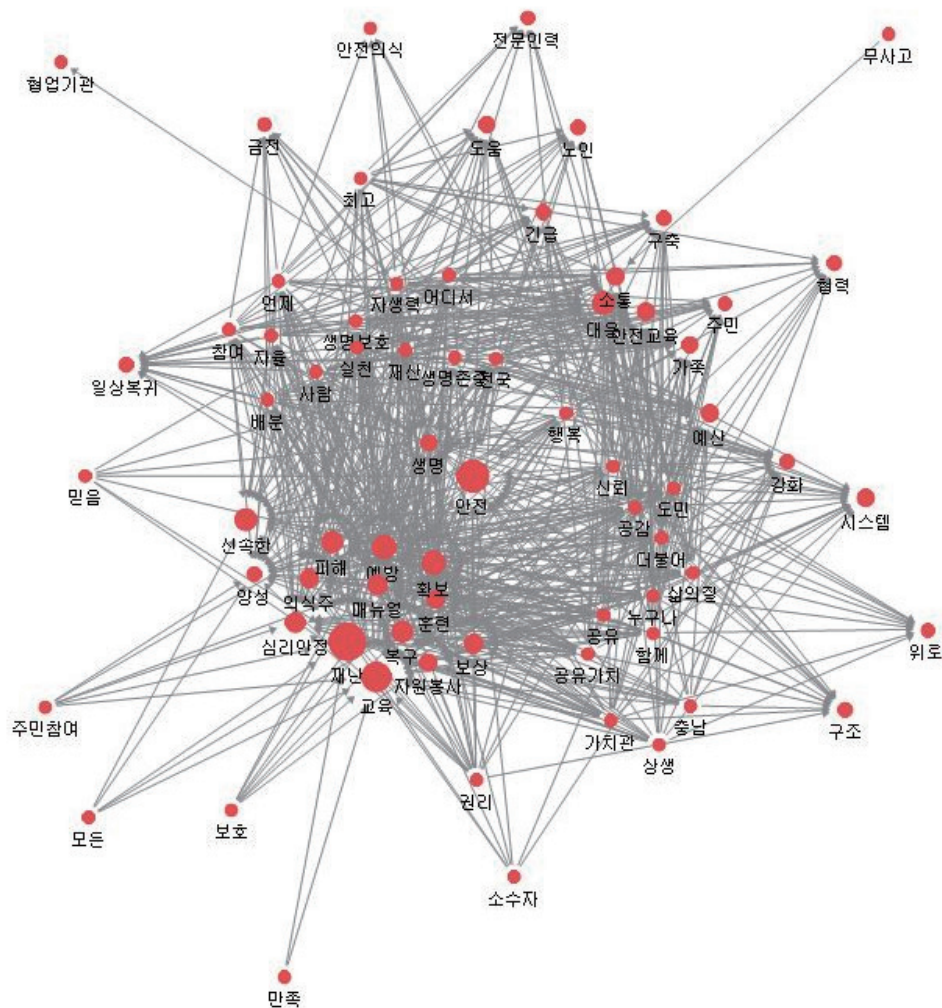


그림 2-19. 시·군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워크숍 결과 핵심키워드간 연결중심성

■ 실행위원 워크숍 결과

- 비전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된 의견을 취합
- 그 결과, 전국최고, 감소, 재난안전, 안전사고, 교육, 도민, 안전의식, 네트워크 등의 순으로 핵심어 도출

표 2-23. 비전의 목표에 관한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순위	핵심키워드
1	전국최고	7	안전의식	13	안전충남
2	감소	8	훈련	14	위험요소
3	재난안전	9	네트워크	15	충남
4	교육	10	안전	16	확보
5	구축	11	안전문화	17	활성화
6	도민	12	안전사고	18	공동체

- 제시된 의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안전, 안전문화, 재난안전, 안전의식, 교육, 도민, 활성화, 일상화 등으로 나타남
- 비전 수립의 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갖춘 충남을 지향하며, 안전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한 문화의 형성, 네트워크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위험요소 저감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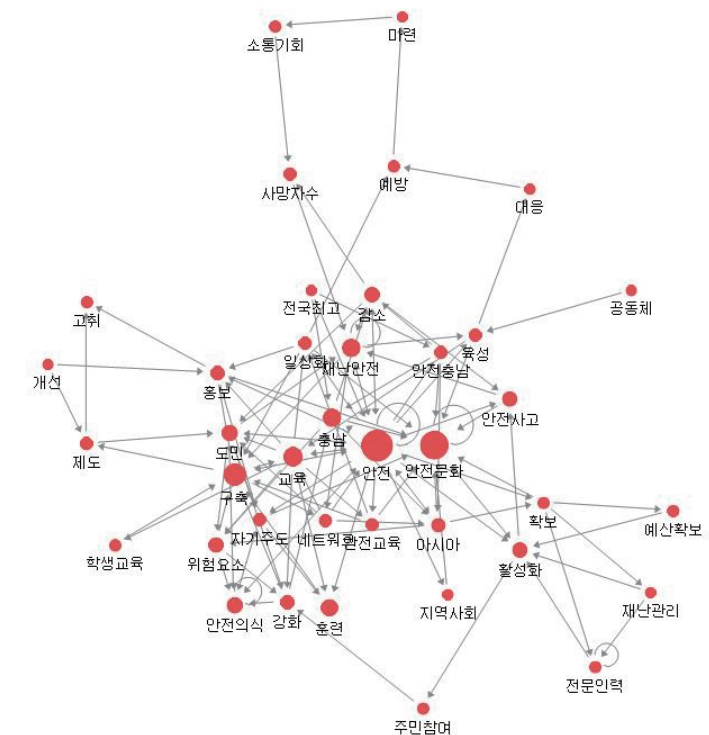


그림 2-20. 비전의 목표에 대한 핵심키워드간 연결중심성



5. 충남의 재난안전관리 종합진단

• 충남의 안전환경 강점(Strength)

-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인접한 세종에 국민안전처가 자리하고 있으며, 소방 교육시설, 재난안전(환경·기술 등)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되고 있음
- 충남도청 차원에서는 재난안전 전담부서 및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추진해오고 있음

• 충남의 안전환경 약점(Weakness)

- 충남은 2015년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재난안전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난 유형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큼
-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조직이나 주민의 안전의식, 그리고 교육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 재정적 측면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양호하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에 속하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투입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민선6기 들어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었으나, 그 역량이 검증되지 못한 실정임
- 지리적으로 중국 동부 산업시설 및 원자력발전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연약지반으로 지진발생 위험지역에 속함

• 충남의 안전환경 기회요인(Opportunity)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ICT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정부의 예산 지원, 재난안전기술개발, 방재산업 육성,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 등 관련 법제도 재정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 도는 도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

• 충남의 안전환경 위협요인(Threat)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각종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각종 전염병을 비롯한 신종재난의 증가와 사회기반시설의 연계성이 증가하면서 복합재난 등의 연쇄적 재난 발생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결혼 및 국가간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위협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

SWOT 분석 결과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 정부부처·연구기관·교육시설 집중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 재난안전 전담부서 및 긴급구조 인력 확충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의지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재난안전 취약성 격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조직 불명확 주민 안전의식 저조 및 교육기회 부족 재정자립도 취약 및 예산투입 경직성 안전거버넌스 역량 미입증
Opportunity (기회)	SO전략 (공격)	WO전략 (국면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ICT기술력 우위 국가 재난안전 R&D 등 산업수요 증가 재난안전 법제 정비 및 고도화 높아진 자치의식과 지역사회 공동체 관심 증가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한과 책임의 안전자치 구현 안전정보 접근권 및 전달체계 강화 재난안전 DB 수집 및 관리 등 정책기반 강화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집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전서비스 체계 강화 다양한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술적용 재난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Threat (위협)	ST전략 (다각화)	WT전략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 신종재난 및 복합재난 증가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 등 재난취약계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의 재난안전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 향상 안전취약계층 배려 정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중심의 안전기반시설 강화 및 안전한 지역만들기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충남도정 및 조례의 안전요소 강화 안전골든타임 확보 체계 강화

III. 2050년 안전한 충남을 위한 비전

1. 기본이념

■ 생명가치 존중

- 생명이란 유기체와 분리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창발성의 속성으로, 생명가치 존중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지닌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 지켜져야 함
-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를 아끼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로운 삶은 안전할 때 가능하므로 안전의 기본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생명간의 우열을 가르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함
- 현대 사회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시대로, 안락한 생활공간과 협력적 거버넌스도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정 없이 출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질서가 시스템 내에 정착해야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생명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

■ 더불어 함께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의미하며, 상호성에 근거하여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조정을 의미하며, 단순한 참여와 타협의 단계를 넘어 서로의 협력과 의존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홍수 때 언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안전은 함께 연대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임
- 안전은 외부에 의존하여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하는 공동체를 통해 확보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역량, 협력과 배려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누리는 안전

- 지금까지 안전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로 여겨져 왔으며, 국민은 '돌봄'을 받는 수혜자일 뿐 주

체적인 위치로 자리 잡지 못하였으나, 누리는 안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가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거나 맛본다는 뜻으로, 시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전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안전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안전을 의미하며, 안전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가 충남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

2. 비전의 목표와 전략방향





1) 비전과 목표

■ 5대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인식, 가치관의 총체이며, 안전을 일구는 기반임
- 개인은 의식적 학습을 통해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고, 체화된 행동의 집합이 장시간 지속될 때 문화로서 정착하게 됨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지의 둔감함을 극복하기 위해 배움과 훈련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이에 맞는 실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안전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략 1. 자율형 안전 활동 기반 구축
전략 2.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전략 3.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목표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 안전한 생활터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 삶터, 직업 생활공간으로서 일터, 학습 공간으로서 배움터, 레저와 관광 공간으로서 놀이터를 설정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자연적·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음
- 지역사회와 구성원,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능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예측적이고 과학적이며,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생활공간을 만드는 일은 공간 특성에 맞는 일상적 시간의 안전 확보 노력, 비상시 대응 노력, 재난 발생 이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조치를 포함한 전략을 통해 달성 가능함

전략 1.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전략 2.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전략 3.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목표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국민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안전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은 복지에서 강조되어야 함. 안전복지는 자선활동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 영역
- 안전복지는 생활환경에 잠재해 있거나 내면적인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이며, 사고발생 이후 치유와 자활지원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임
- 저소득층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대한 경제적 대응능력도 부족하며, 이는 저소득층의 추가적 계층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활과 참여, 개인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관계맺기 등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복지의 핵심임

전략 1.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전략 2.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목표 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 시스템이란 각 구성 주체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전제 조건을 지님.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내 관련 부서와 모든 민간 자원이 질서정연하게 작동해야 함. 안전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위한 선진적 운영이 필요함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도민이 지닌 위험 인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소통은 일반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는 소통의 전제가 됨.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부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도민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 전략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전략 3.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목표 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서부터 안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정부, 시장,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할 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
- 지역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은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토론과 합의를 추구하는 문화적 성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기관은 거버넌스의 구동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해야 함

- 전략 1. 도민 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 전략 2.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구성
- 전략 3.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 거버넌스 운영

3. 목표별 전략 및 추진과제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자율형 안전 활동 기반 구축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안전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 교육 강화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다양한 테마의 생활 운동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생활안전 위해요소 점검방식 개편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계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요소 반영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문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안전 · 안심 위협요인 저감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골든타임 저해 요인 제거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재난안전관리 정보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관계 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안전자치 구현 방향 정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재난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확대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조직 리더의 안전역량 강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네트워크 구성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 안전마을 육성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 개발 협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목표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전략 1.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함. 도민, 민간 기업, 지역 안전문화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난 10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57%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응답
- 안전문화는 도민이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인식하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도민 스스로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별로 개별화된 노력으로 특정 시기 또는 사고 발생 이후 전개되는 교육보다는 안전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성을 갖는 안전문화 정착이 가능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둔감하거나 안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전 무지(無知) 현상임. 안전불감증은 안전문화 형성 초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성숙한 안전문화의 발전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민이 참여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매월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식을

마련하고 도민의 참여 및 손쉬운 체험을 통해 안전문화의 의미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캐나다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핑크셔츠 데이’방식 활용
- 새로운 유형의 안전 위협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발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는 물에 뜨지 않는다(Kid don't float)”는 표어를 내걸고 어린이 익사사고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 ‘영정활용 캠페인’을 통해 과속운전의 위험성과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홍보

추진과제 [2] 안전 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충남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조(自助) 능력을 갖춘 도민을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구조와 구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와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안전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도민은 안전 확보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구조 및 구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키우고, 안전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예측력과 판단력을 갖춰야 함
- 이처럼 도민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재난 발생 초기의 인명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 학생, 여성, 근로자, 군인 등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자신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용 및 기본 교육 이수 의무화가 필요함
- 공동체 단위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보 교환활동을 유도해야 함



전략 2. 전면적 생활안전문화운동 전개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이를 극복하고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며 문화적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면적 안전문화 운동이 필요함.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각적인 방법과 수단 활용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회적 각성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 전체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안전에 관한 강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 맞는 안전에 관한 주제를 설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실시해야 함
- 진행시기를 일정하게 협의하여 이슈 제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며 안전한 사회로 움직이는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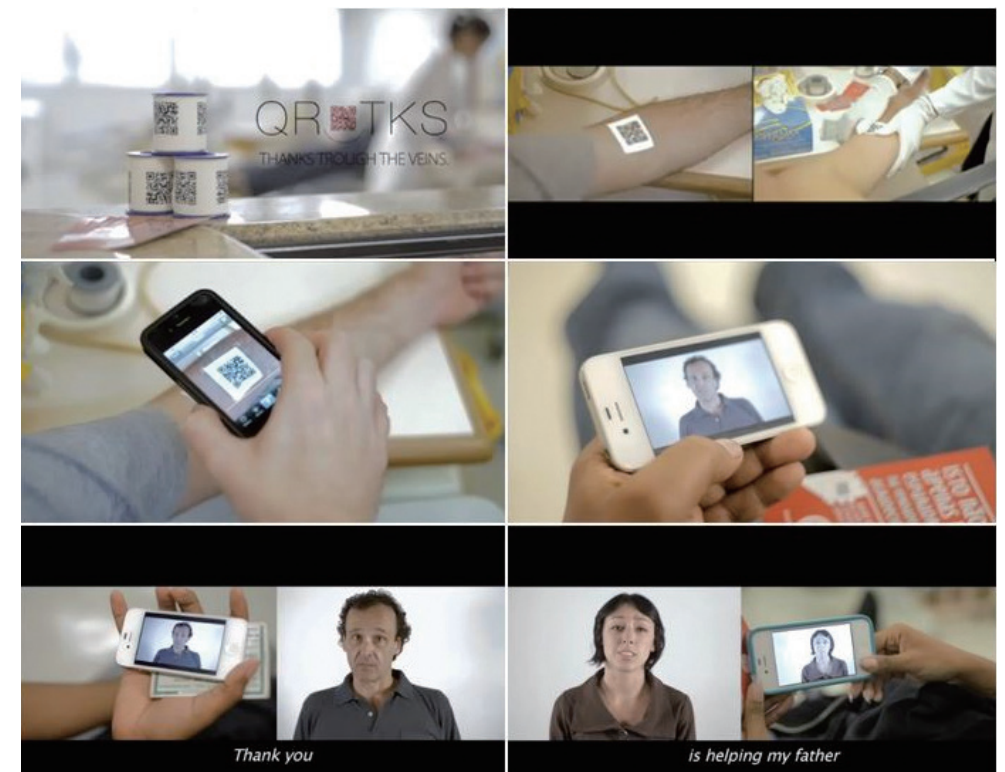
추진과제 [1] 다양한 테마의 생활운동 실시

- 충청남도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 인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 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다양화,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관련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 다양한 안전교육 개발 및 강화 필요
- ‘충남의 생활안전!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아기 때 안전문화를 내면화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일생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실천이 가능하게 해야 함. 이를 위해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및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시설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전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재난·사고 유형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안전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함

추진과제 [2]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 도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 무지증,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고, 테마별, 주제별, 대상별로 안전문화에 대한 실천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위험 및 안전 정보의 공개는 도민에게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한편, 사안에 따라 지역이미지 훼손, 재산권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주민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도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의 감정 확산 운동이 필요함. 브라질 상파울루의 산타카사(Santakasa) 병원에서 실시한 헌혈 QR코드 밴드 배포 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도내 안전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활동에 대해 QR코드를 배포하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Thank you”캠페인을 확대하여 감정 확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1〉 ‘QR Thank you’ 캠페인





추진과제 [3] 생활 안전 위해요소 점검방식 개편

- 생활시설 및 산업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체적인 안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안전에 대해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고 안전요소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안전요소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험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제되는 요인으로 이를 확인·분석·검토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주체별로 시설, 내부,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요소를 고려하고 새로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충청남도는 안전요소의 위험도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위험 대응 요소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사고의 심각성 홍보 및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함

전략 3.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위험 요인들이 등장하고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거주지역의 안전 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관자적인 태도, 무사안일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함
- 안전요소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제도의 구축은 도를 중심으로 기초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를 이루어야 함. 지자체별로 집중 또는 단기, 장기적 측면의 활동 차이를 감안하여 인력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집중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도민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계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요소 반영

- 도정의 주요 정책과제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보다 근본적인 재난안전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의 모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검토와 감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안전관련 요소를 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유도함
- 도정 전반의 계획 수립 및 작성 시 사전 검토항목에 도민 안전 위해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제도화 함

추진과제 [2] 안전등급제 도입

- 충청남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등급의 재구성·재조정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부처 및 담당 부서의 대응 활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전등급제를 마련해야함
- 전국 획일적 기준의 안전등급과는 별도로 충청남도의 안전등급제를 개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등급 확인 체계가 아니며, 소비자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 도민이 거주 지역 및 개별 활동 영역에 대한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취약점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공개해야 함

추진과제 [3] 안전문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하는 도민과 각 기관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안전문화 활동의 참여 및 기여 정도에 따라 동기유발을 위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충청남도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도민의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의 전개를 위한 유인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주체를 개인, 단체 및 기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문화 체험교육 참가자, 안전문화 인증 단체, 안전문화 인증 기관, 안전문화 인증 기업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식 마련이 필요함

[목표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전략 1.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상 시군과 읍면의 격차가 크고 자연환경도 상이함.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삶터와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 안전생활터에서 도민들이 경험하는 주요 위험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정립해야 함
- 생활환경을 생활시설별로 구분하면, 주거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원, 마트, 시장, 영화관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현장, 기간시설(도로, 교량, 철도 등) 등이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안전·안심의 생활환경은 단순히 규제나 제도가 있고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님. 도민 스스로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이나 경험하는 위험 상황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서 변화시킬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적용하는 규제와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를 개발한 후에 규제나 행정,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대형 주거시설 및 대형 공급처리 구조물 등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형 재난을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시설안전 상시점검 기준 및 제도, 대형 구조물 시설의 성능 개선 및 보강 기준과 제도의 마련, 관리 매뉴얼, 대형 재난 시 피난 등을 고려해야 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 대피시설이나 이재민 보호를 위한 시설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도는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등 다양한 생활권에 노출된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대형 시설물 및 사회 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및 작업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도심 및 산업 지역에서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기술을 개발해야 함

추진과제 [2]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대형사고, 에너지 사고에 대한 지역 단위의 위험목록을 별도 작성·관리해야 함
- 우리 도에서 피해정도가 큰 사고 유형을 조사하여 계획단계, 설계단계, 확인단계 및 실행단계(PDCA)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민원 해소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거점 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백신 등 의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거점 의료센터, 보건소, 민간 의료원 등의 정보공유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대형 주거시설인 다중이용시설물 및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신뢰성 확보 및 대형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함

-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등 다양한 생활권에 노출된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적용함

추진과제 [3]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 현재의 안전 관련 규제와 규정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일상생활환경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 환경, 자살 요인들을 찾아 안전 규제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단계에서 확인된 규제와 규정은 다음 단계의 도민의견과 비교하여 개정, 폐지, 신설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도민의견조사, 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위기, 위험상황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안전관련 규제 및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피상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해야 함

추진과제 [4] 폭력과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폭력·범죄 예방 전략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존해 왔으나, 지역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완성 가능함.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지역공동체'는 21세기 국가 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향후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임
- 지자체는 지역 내 폭력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① 범죄 위험 공간, ② 범죄피해 취약집단, ③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④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범죄 예방 전략은 범죄자들이 이성적 존재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지만 범죄자 중 일부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기계적 감시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통해 기계적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

전략 2.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도에서 육상 및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초동조치 역량 강화가 중요함. 특히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입체적인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해상과 육로에서 교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연안에서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는 강한 조류, 목표물을 분간할 수 있는 최대 거리 확보가 어려운 저시정 해역이 많음
-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구급상황의 경우, 통상의 골든타임은 5분이지만, 시군단위별 도로상황과 시간대별 운행차량의 정도가 일차적인 중요변수임. 보다 중요한 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로 기준 완화(2009년 도로폭 등의 기준이 하향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응급, 구조상황 외에도 비상 상황과 위기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상황별로 인명 구조 및 구호를 위한 안전 골든타임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 대응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해 점검해야 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골든타임 저해 요인 제거

- 비상시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조 시간을 확보해야 함
- 시설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법은 있으나 지원이 미비한 경우를 발굴하고, 일상적인 상황(비응급상황)에서 기초질서 및 규정준수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골든타임 저해 요인을 사고 유형별로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초기 대피요령과 응급 구조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조기 발견과 상황전파를 위한 역량 강화,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과 인명 구조 활동, 응급의료소 운영, 광역 출동 및 지원기관 현장 활동 순으로 진행
- 이를 위해 대응기술 및 인프라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신종 및 복합재난을 대비한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여 대비해야 함



추진과제 [2]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 최근 재난발생 유형이 복합적 형태의 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2016년 충청남도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 운영방향에서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를 위하여 닥터헬기 활동 지역 확장, 119안전센터·구급차 보강,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기능 지속 확충, 각종 재난사고 철저한 대비 및 신속한 초기 대응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함. 그리고 24시간 재난응급 상황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보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응급대응 훈련이 관계기관 상호간 통합적 대응 형태로 이루어지고 구급대응훈련의 추세가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출동체계 가동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구급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장지휘소와 현장응급 의료소 간 지휘·보고체계 확립, 유관·단체 기관간의 임무의 적절성, 이송환자 현황 등에 대한 SNS단체 카톡방 공유 현황 등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응급환자 구명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복지부는 닥터 앰بول런스 및 이동형 병원 등을 기술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우리 도와 연계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피해자 위치정보 조회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우수 자원을 모집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국내 재난 피해자는 매년 36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구호 체계 강화를 포함하여,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이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신속한 상황 반응과 생활 복귀를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미국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뇨, 천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7만 1,000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일본도 비경제적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를 통해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같은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인 수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물류 등의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유사시 전기·가스·수도 등 라이프라인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민간업자들과 '재난관리협정'을 맺어 재난이 발생하면 물자나 의료 지원, 긴급 수송지원, 이재민 수용장소 제공, 라이프 라인 복구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무상의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라이프라인 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발굴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고, 재난 발생 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 백업, 로컬화 등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함

추진과제 [2]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 재난에 노출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재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 경제력도 회복될 수 있음
- 우리 도의 맞춤형 민관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복력 향상을 유도하고, 놀이시설이나 놀이 콘

전략 3.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힘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재난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원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재난에 강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텐츠를 통해 우리 도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한 재난 안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안전 체험 테마파크를 개설하여 스스로 안전의 대응자가 되도록 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함. 안전지킴이 전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재난 유형별 또는 원인별로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지역 문화와 결합된 안전놀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안전체험 콘텐츠 사업, 매뉴얼 교육 콘텐츠 사업, 부문별 안전 콘텐츠 사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양성과 사업을 실시해야 함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적용한 재난 시뮬레이터 개발, 재난 체험 게임 기술 개발, 가족 체험형 대국민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현장 대응 조직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충남 맞춤형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됨

추진과제 [3]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 현행 구호체계는 그 대상이 자연재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항목도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함
- 또한 구호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구호 약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성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호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재난 및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회복력 향상을 위해 재난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재난피해 이후 지역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순 피해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목표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전략 1.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 발생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전달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원화된 홍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과 관련한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으며, 일원화된 언론창구도 없어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불신이 가중됨
- 최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여전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재난안전 분야의 서비스 정보는 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국가 정책의 개발과 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개발과 국민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 도민 누구나 안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관리되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폭넓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의 공개가 필요함
- 현재 부서별, 지역별로 안전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정보공유 및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재난안전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의 공개는 자치단체의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됨.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자료를 공급하고 공유해야 하고 복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도민들이 위험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도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에 대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과제 [2] 재난안전관리 정보 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 재난안전정보체계는 도민의 능동적 참여하에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직접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러한 도민 참여형 재난안전정보체계(망)의 목적은 지역적 위험으로부터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체계 구축(H/W) 및 달성하려는 요소들(S/W)임
- 주민재난안전정보망은 공공재로서 충남도 내의 위험에 대한 지역성과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주민안전 최하한선을 보장하려는 것임
- 기존에는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그 주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
-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지적 공간정보가 우선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의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고 공간정보를 수집해야 함
- 지역의 재난안전 상황에 친숙한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재난안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민이 주도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적 모델이 바람직함. 우리마을 재난안전지도 작성 워크숍 등 주민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해야 함

추진과제 [3]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 도민의 접근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안전정보의 매체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 매체를 개발해야 함

- 충남도민의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의 운영은 분산 처리되는 정보를 충남도가 모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충남도 및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linking)해주고 각 기관이 어떤 종류와 어떤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정보의 제공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반 재난안전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에게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이 가장 체감도와 접근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전략 2. 수요자 중심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서비스 수요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역별·개인별 속성 및 재난안전 체감 항목 정의를 통해 가구별 재난안전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개인은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역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재난안전 관련 민원데이터나 SNS Buzz 분석 등에 의한 보다 세분화된 도민의 재난안전 니즈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도민 안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지금까지는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 있고 위험정보에 대한 소통이 부재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체감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도민의 안전육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적극적 안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은 적극적 안전 복지(positive safety welfare)가 사후적 재난 및 안전 대응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통한 사전적 안전 확보를 지원하려는 체계의 구축을 말함
- 지역의 안전수요 증가 및 도민의식 향상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하여 안전복지가 필요한 이웃에게 맨투맨 안전복지 지원이 필요함
- 안전복지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운영하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우리 도의 다양한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심각성도 높음 따라서 도민의식 향상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 요구와 함께 안전수요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 장애인, 고령자, 국내체류외국인, 여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 내부에 권한이나 직책, 능력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과 작용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주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살은 충동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층 아파트 옥상이나 교량 등에 자살방지 문구를 넣거나 맹독성농약판매시 이를 주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자살위험에 놓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추진과제 [2]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안전이 최선의 복지라는 안전복지 기본선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복지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부서별, 생애

주기별, 대상별, 장소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재난약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존에 마비되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던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안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재난 약자의 경우는 안전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재난안전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고충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농산어촌이 많아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낙후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약자의 소외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방안을 시군단위에서 추진해야 함

전략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함
-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심기오, 2010: 9)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재난약자,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은애, 2008; 심기오 외, 2010; 김윤희 외, 2012; 오금호 외, 2013)



〈표 3-1〉 국가별 재난취약계층의 기준

국가	용어	정의	대상
미국	vulnerable people susceptible to attack [재난(취)약자]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
일본	재해약자 [災害弱者]	위험관리능력, 정보입수·발언능력 및 행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
한국	재난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안전약자 안전취약계층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

-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内閣府, 1987)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방재백서는 재난약자를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을 함에 있어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Nemoto·Ariga, 2014: 3)하고 있음
- 미국은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정의하고, 주요대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재난약자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으로 정의하고, 그 주요 대상으로는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됨
-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재난취약계층이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재난 시 보호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대피를 돕는 문화를 확산하고,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피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함
- 재난 복구 및 구호 시 여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물자 확보와 지급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며,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안전은 기본, 최우선 가치’, ‘안전투자는 이익’ 등 안전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나 안전은 기업이나 기관의 이익 보장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써 사고와 안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감시자인 도민, 그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기관은 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는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안전에 대한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에 따른 위험 저감 정도, 재해 감소 정도, 안전관리체계의 변화 등을 통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도가 필요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급자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2] 사회적 관계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은 범죄의 위험, 재난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여성이나 1인 가구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독거노인 증가는 고독사 및 노인 자살의 위험을 키움
- 우리 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노인인구, 거주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함
- 지역이 공동의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안전 확보에 중요하며,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 취약계층을 지역이 함께 돌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복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시설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 도민의 주관적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가 있어야 함



- 단순 물품지원이나 후원에서 벗어나 주민들과의 관계 복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함.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경제적 빈곤, 1인가구 등 고립과 우울 속에서 분노조절 장애 및 자살충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관계망 복원을 통해 해결함
-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을 타개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좋은 예로 공동부엌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마무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주민들을 일상적인 사회관계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목표 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1)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재난관리체계와 지방 관련조직과의 연계성 부족에 따라 재난대응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명확한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함
- 재난 발생 시에 관련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명령체계의 혼선이 있음. 또한 중요한 점은 평상시의 역할 및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서, 지방경찰청, 기타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어렵고 이들 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 도는 큰 틀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분산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안전자치의 구현은 충남에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부서의 분산된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된 대응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관련 부서 및 인력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하여 명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고, 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재난안전 조직 및 인력의 위상 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전문

성 확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의 구현”전략은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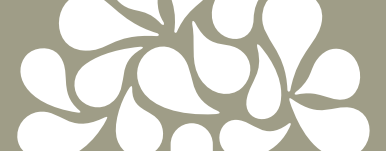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대비가 필요하며, 평상시 생활안전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발생 시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통제단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가 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현장에서는 긴급구조 활동과 그 밖의 재난대응활동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지휘체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지역대책본부와 지역통제단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 현장에 서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함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 긴급구조 및 사고수습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역할 분담 시 자치단체의 분명한 대응력 강화를 규정한 입법예고를 시도하거나 지침 또는 조례 규정(안) 마련해야 함
- 자치단체 내 실질적인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통합이 정책대안임. 우리 도가 주도하여 통합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 즉, 소방조직과 경찰 조직,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 등이 상시적으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대응통합센터(가칭 스마트 빅보드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임

추진과제 [2]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안전자치는 충남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분산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안전자치의 구현은 충남에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부서의 분산된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된 대응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 안전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난안전 기관들과의 단일기관적 수직적 협력 및 지원체계는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함. 이에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공조 및 협업체계 구축,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재난에 관한 초동 대응기관은 지방정부로 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과 조정의 업무를 수행함. 지방정부는 재난발생 시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재난대응기관들은 자신의 고유영역을 고집하며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방의 재난안전 업무협력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평상시의 협력 체계가 재난발생 시에 작동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고 이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진단과 관련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업무 및 기능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동원 자원(인적, 물적, 시간적)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 자원동원 네트워크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함
- 공공부문의 업무적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민간의 전문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동원 및 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행정역량 강화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 역량 강화의 두 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전략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1)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 소방, 해경 등 각 분야별로 독립된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재난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통합지휘체계가 미흡하여 현장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확대 단계별로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반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아 돌발 상황에서 현장대응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재난대응 물자, 장비, 인력 등이 현장에 제공되어 자원이 부적절하게 제공되거나 낭비되는 실정임

- 전문성 확보는 재난안전 경력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유관 조직과 업무를 반영한 경력지도를 구체화해야 하며, 경력지도에 의한 배치와 필요한 직무역량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자원 관리,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동원과 관리가 요구됨
-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응급조치의 지연이 발생함
-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필수적임. 재해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과 재난발생시의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언론의 참여의지를 확대하여야 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 재난대응 동원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원을 장비, 자재, 인력 등의 분야로 분류하고, 재난유형별로 핵심자원·특수자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각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연계·통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공공활용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산을 위한 기능을 포함함
-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지식·판단·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악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충남도에서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규모별로 필요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교육·훈련하는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추진과제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 공공영역에 재난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와 같은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이 커짐. 도민들은 자연재난보다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에 주목하고, 안전사고 이면의 배경에 특히 관심을 갖게됨



- 사고발생 경위가 사회문제와 결부될 경우 부정적 여론 형성의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 자체가 가져오는 위협보다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된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한 위기의 증폭과 사회적 갈등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함으로써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2차적인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국민의 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 상황을 대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 범위, 내용을 정립하고, 국내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사례, 우리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함

추진과제 [3] 재난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현재의 분산적 안전관리 운영체계 하에서는 기획 및 조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과의 상호 협력이나 협의·조정 필요성이 낮음. 이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시책과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 예산 낭비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내포함
-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총괄부서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유 및 표준화, 부서간 실질적 의사소통과 협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등 대외기관들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정례적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실무자들의 수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함
- 국제적인 교류 협력은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등 재난 관리 환경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려우며, 우리 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안전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중앙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재난대응 합동훈련 방안을 마련
-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 또는 참여하여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후환경이나 재난특성에 맞는 선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전략 3.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안전을 위한 계획은 세부적인 투자 우선순위와 자원조달, 전 과정에서의 성과 착안점 등이 명확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계획 및 매뉴얼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적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활동의 구체화가 미흡함. 이는 성과지표의 측정요소와 측정방법의 구체화로 보완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련 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행 또한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한계와 새로운 위기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안전 행정에 관한 주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재난에 의한 피해수준과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 재해복구 및 보상 등 중요시하는 현재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재난의와 재정립이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는 부서별 중복된 예산낭비 우려가 존재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예산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에 재난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예산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간주되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주로 복구예산 중심으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예방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계획과 매뉴얼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이는 실제 계획만 존재하고 평가와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재난안전 관련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 지역현실을 반영한 중앙-지방, 지방정부 조직 내, 지방정부-협력기관, 공공부문-민간부문, 또한



상호 교차적 네트워크 방식의 재난안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실제적으로 재난안전계획의 구체성과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이 부족한 경우 초기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마련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집행 노력이 필요함
- 사전 협의된 많은 계획들이 재난대응에 활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화되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과 매뉴얼을 수립해야 함
- 우리 도의 재난안전 계획 수립은 내부 부서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이 작성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론 및 실무 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제 계획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수요자는 매뉴얼 활용의 대상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이 될 수도 있음
- 수요자 중심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계획은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지리적 정보, 지역 재난관련 특성, 재난관리 단계별 수행 활동 시나리오 등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야 함

추진과제 [2] 재난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초동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재난 및 업무 영역에 따라 분산된 재난관리체계에서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저비용의 전파망 구축이 필요함
- CCTV, 센서 등 첨단 ICT 장비를 통한 정확한 재난정보 수집하고, Big Data 재난상황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재난을 예측하며 지상파·지역유선방송, IPTV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함
- 현재 분산된 재난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플랫폼(Smart Screen)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실과 현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재난안전 포털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난관리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됨.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정보는 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함. 또한 유관기관과의 상호 지식공유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재난관리 초동대처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및 왜곡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즉 재난 시설정보와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에 활용해야 함
- 예방단계에서의 재난정보는 주민들에게 재난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구축된 재난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함.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유기능과 함께 재난의 예방과 대응책을 홍보하고, 나아가 언론기관에서 수행한 과학적, 객관적 규명 내용을 지식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재난 정보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상호협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추진과제 [3]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 성과는 조직의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산출하였는가에 대한 기관의 핵심 활동의 산출 또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 성과평가는 관련된 목표를 유관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임
- 재난안전의 성과관리체계는 조직업무평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 조직의 방향성 제고, 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략중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업무성과를 개선하는 기본적 성과관리 목표달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과관리의 기반인 전략기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구성 중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신뢰성 확보에 있음
- 성과지표의 명확한 설정, 성과달성을 위한 활동의 측정방법 구체화가 우선되어야 함. 또한 유용한 정보에 의한 측정값의 활용가능성, 전체 업무 활동 반영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성과산출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난안전 행정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목표 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전략 1. 도민주도형 안전활동영역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네트워크는 물론 그 구성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기능적, 영역적 범위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안전거버넌스의 경우, 정부부문 주도 방식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시민주도형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상향식 시민안전공동체 구축으로 안전거버넌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안전거버넌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안전협의체 구성이 필요한데, 안전 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안전거버넌스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의 공조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시민이 주도가 되어 안전마을 만들기와 같이 주민밀착형 생활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와 운영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안전진단 정례화 모델 개발이 요구됨
- 이를 통해서, 하향식 안전 협의체 구성이 아닌 시민 주도의 방식의 시민안전공동체구성과, 안전거버넌스 활동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인 확장성이 강화되고 참여와 교류도 활성화 되어 활발한 안전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를 도민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민 자율에 기초한 생활 속 안전문화를 실현해야 함
- 도민 안전모임은 지역사회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방안

임. 충청남도 안전은'스스로 안전, 나부터 안전, 이웃을 위한 안전'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전모임을 개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에서 시간적 · 공간적 지원을 통해 도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나아가 사업장 안전모임, 산악회 안전모임, 학교운영위원 안전모임, 경로당 안전모임 등 직종 및 연령별로 안전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법을 개선하고 선순환적 안전신고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신고사항을 데이터화 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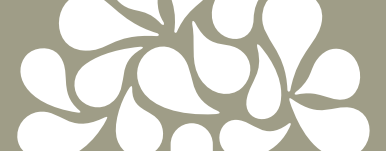
추진과제 [2] 조직 리더의 안전역량 강화

-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어느 계층에 대한 교육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조직 내 리더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이를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파급하는 교육방식이 바람직함
- 경영층의 안전 전문성 확보와 의식 내재화를 통해 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야함. 직장 내 관리자 인식전환으로 선진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필요함. 이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질책 · 비난하는 대신 칭찬을 할 수 있는 'No blame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업종, 공동체 등 각 분야 대표자를 소그룹화 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교육을 우선 실시함. 안전리더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 안전 교육 및 활동을 주도하게 하고, 참여도 제고를 위해 안전리더 교육 실시 및 수료 대상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대상과 직능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과정 예산을 편성 지원함

전략 2. 다양한 형태의 안전네트워크 구성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안전거버넌스가 연령과 문화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일부 중복성과 비



효율의 측면이 있음

- 기존 조직들을 대상으로 세대와 문화 및 계층을 고려한 생활안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자와 민간부문 등 협력체제로 활용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안전관리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 생활안전협의체는 기존의 다양한 지역사회 방재관련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조직으로써 생활권 단위의 안전활동을 위한 기존 조직 및 민관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도민 주도형의 기구로 구성
- 마을 또는 동 단위의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시 이를 중심으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생활권 단위의 안전활동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 함
- 지역공동체 또는 생활공동체에서 안전거버넌스의 토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 협동과 학습 그리고 선의의 경쟁 구도가 필요함
- 주민밀착형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첫째, 정부와 민간지원주체가 중심적 역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둘째,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셋째,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협력·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을 비롯한 행정 관계기관의 협력을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생활안전 협의체의 구성단위는 마을 또는 동 단위의 생활권 단위가 되며, 구성원은 주민, 단체, 활동가, 학교, 병원, 치안센터 등이며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복구활동을 지원함

추진과제 [2] 주민주도 안전마을 육성

-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경제공동체(마을기업, 정보

화마을 등), 생활공동체(희망마을, 주민자치회 등), 사회공동체(새마을 운동 지역 공동체 사업, 새마을금고 지역공헌 사업 등)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음. 이에 재난안전 공동체(안심마을 등)의 새로운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난극복을 위한 지역별 취약성 발견과 지원이 가능함

- 안전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등)과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 구조물 밀집지역 등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함. 재난 징후로 인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재난취약시설 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 이를 통한 안전점검, 점검반영 또는 점검문제 이력 등을 종합적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충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해야 함. 재난안전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위험에 대한 사전인지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지역 자율 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 지역별로 취약성을 스스로 발견하여 주민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연계해야 함. 충남의 재난안전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TF가 구축되어야 함.
- 내 지역의 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 안전 민원을 취합하기 위한 투자 필요. 충청남도 학교 재난 취약성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지킴이 인력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또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스마트 안전 귀가를 위한 실시간 정보 플랫폼 구축하여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 안전망 운영.
- 문화재 안심 공동체, 산림해양 안심 공동체와 같이 재난유관기관 상시적 협의체 구성하여 안전점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하고 비치해야 함. 관련 관리자 및 해설사 등의 모의훈련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병행(안전교육, 예방, 안전산업 등), 입상작은 지역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으로 연계하여, 선정된 제안자가 안전정책 입안자로 이력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참여를 유도



전략 3.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도의 경우 권역별로 재난 발생 유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획일적인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천안, 아산 등의 북부 도심권역의 경우 화재 등 도시형 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등의 서해 해안권역은 해양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청양, 부여,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등 내륙 동남권의 경우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히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많음
- 따라서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한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이나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 훈련 프로그램 발굴과 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이 요구됨
-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의 투 트랙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운영과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네트워크가 보다 실행력을 갖추고 실질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 및 여건 조성과 같은 인큐베이팅이 가능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 [1]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 개발

- 공동체의 유형과 규모, 안전 및 재난 서비스의 특성과 수요 유형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을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자율성과 작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거버넌스 조직의 생명력인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생활기반의 다양한 안전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을 의미함

- 따라서 안전총남 비전이 지향하는 안전 취약계층 또는 안전 약자들을 우선한다는 의미와, 주민이 자치행정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PROSUMER(생산자+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의 자원을 투입하고 융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형과 농촌형 등 다양한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 따라 자율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부여는 물론 활동 공간과 연건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도시·농촌별/ 시장/ 산업 등 참여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안전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등)과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 구조물 밀집지역 등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함. 재난 징후로 인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지역별로 취약성을 스스로 찾아 주민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연계해야 함

추진과제 [2] 협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 협치를 통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안전정책 전 영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집행과 평가를 함께 공유함. 도민 안전 확보에 있어서 실질적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상존하는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협치를 실현하기 위함
- 시민은 관련 당사자, 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도는 소관 부서에서 역할하는데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 별 협치 지원조직을 두어 지역주민과 시장 군수, 행정부서,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 정도에 따라 협치의 한 축으로서 도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수행함
-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에는 주민모임을 활성화 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 리더를 발굴·육성, 안전 위해요인을 조사·발굴하는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와 안전 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안전 관련 활동과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IV. 향후 계획

1. 실행계획 수립

- 안전비전의 각 목표별 전략에 대한 세부 시행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함

(1) 소위원회 구성

- 현재 비전 수립을 목표로 설정된 5개 분야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소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도민 이해관계자 1인, 직능단체 대표자 1인, 공무원 1인, 총남연구원 연구담당자 1인 등으로 구성
- 각 소위원회는 자체 활동하며, 소위원회에서 추진과제별 실행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작성함

(2) 안전비전 확산 방안 마련

■ 비전대학 운영

- 수립된 안전 비전의 각 목표에 해당하는 5개 부문별로 소관 소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안전비전대학을 운영 (2월 ~ 4월 중)
- 대상자는 도민, 직능단체 협의회 구성원, 기업, 공무원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은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담당함

■ 안전비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안전비전 확산과 도민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기관, 실국장, 부단체장 협약을 포함하는 안전비전대토론회 개최(4월 중)
- 안전비전에서 강조하는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를 강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1~2월 중)

■ 시군 순회 타운홀 미팅

- 소위원회별 실행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청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시군별 타운홀 미팅 개최(6월 ~ 8월 중)

2. 행·재정적 지원

(1) TF 설치

- 전문성 및 기획능력이 인정되는 공무원 5인 내외로 구성
- 안전비전 실행업무의 기획, 자료수집 및 분석, 시군 및 관련 부서간 협력, 실무회의 및 상황보고를 총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함

(2) 예산투자계획

- 중·단기 추진사업의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집행을 통해, 장기 추진 사업은 추계예산을 통해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함
- 안전예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안전정책실에서 담당하여 일관성 있는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함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기준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도민 안전 확보에 활용해야 함
- 안전예산은 표적화하여 집중 투자부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3. 평가체계 개발

(1) 안전충남비전의 성과지표 측정요소 마련

- 안전충남비전에서 제시하는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설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세부 측정요소는 업무 및 활용 유형에 따른 각각의 성과지표의 모습을 갖추어 성과지표로 개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성 및 정량 속성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하는 복합지표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음
- 현재 안전충남비전의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내용 중 많은 부분에 중복되는 세부과제들이 존재하



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할 것임.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 과제 내용의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므로 주민참여, 교육, 정보접근성, 지원,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적절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충남비전 성과지표 개발 과정의 고려사항

■도민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최근 성과관리의 중요한 지향점은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변화임. 이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성과관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부문이 되고자하는 변화라 할 수 있음
- 수요자 중심 즉, 도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는 첫째, 성과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측정요인의 구체화된 기술, 도민 입장에서의 언어적 접근성 확보, 자원투입의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이해자료 제공,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내용의 구체적 기술 등이 이루어져야 함. 성과관리의 한계점 중 하나는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임
- 최근 영국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안전충남비전의 경우 도민의 참여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 등이 핵심인 과제가 많으므로, 도민이 만들고 도민의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갖춘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도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도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은 만족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보다 구체화된 언어로서 정량적, 정성적 측정요인이 세분화된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임. 복합지표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중요한 점은 공무원 등 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 아닌 실제로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체감 중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문항목 또는 정량적 세분화된 개선실적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도민이 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언어사용과 상세적인 성과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련 기관, 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협업과 자율성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경우 단일한 기관이나 부서 등이 독립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경우

가 많음. 만약에 분산된 성과관리체계로 개발될 경우에는 업무 및 예산의 중복과 혼란, 도민의 성과에 대한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유관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강조하고 전략과 비전 체계에서 이를 연계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또한 자체적인 평가 및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자율성을 강조해야 함. 이는 성과평가의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함
- 또한, 성과관리의 정교화를 통해 안전충남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산출, 중간결과, 최종결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측정 방법 개발, ② 유용한 비교 그룹 확인, ③ 적절한 그룹을 대상으로 측정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④ 잠재적 기회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제공, ⑤ 자원 및 산출을 통제할 수 있는 측정 기여도 향상, ⑥ 측정 방법과 프레임워크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함. 각각의 요소들은 연계되어 있으며, 반복되어 합의된 주요한 변화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발전하여야 함(New Zealand Government, 2008).
- 이 과정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 역할이 분명해 질 것이며, 기관 내에서도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책임을 명확하게 배분할 수 있음(국무조정실, 2015a)
- 다년도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안전충남비전 성과관리계획 실현가능성의 핵심은 이러한 고려 사항들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과관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에 있음

(3) 핵심 성과지표 평가방법

■평가 모니터링

- 안전비전에서 제시된 추진과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조정·보완·환류 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매년 운영
- 모니터링은 재난안전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안전비전의 전략에 대한 과제별 추진 사안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써 안전정보 DB를 활용하는 한편 추진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자료를 제출받도록 함
- 이를 토대로 전년도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과 계획에 반영
- 모니터링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안전 변화 동향에 관한 지표와 과제별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구성



- 안전환경 동향에 대한 지표는 중장기적으로 충청남도 전반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안전지수를 개발하고, 도민의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함
- 추진과제별 시행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실적, 개별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업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작성하면서 지표를 설정함

■ 안전 백서 발간

-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하여 안전관련 사업추진 실적, 안전도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 '충남안전백서'를 발간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함

참여연구진

주관기관 충청남도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연구책임

조 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

내부연구진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박근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류희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민상 백석대학교 교수
노황우 한밭대학교 교수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배동철 호서대학교 교수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정원희 건양대학교 교수
이창길 인천대학교 교수
김근영 강남대학교 교수
김겸훈 한남대학교 교수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김도형 텍사스주립대 교수
이주호 세한대학교 교수

행정지원

전병욱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유재룡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조대호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이종현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주무관
유상근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주무관

안전충남 2050

행복한 안전충남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

발행일 : 2016. 12.

발행인 : 안희정

기획·편집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Tel) 041-635-2171

www.chungnam.go.kr
